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제주도와 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도내 36개 기관·기업·시민단체가 참여했다.

## 해양심층수·용암해수 대우 ‘천양지차’

해양수산부, 용암해수 ‘소금물’로 인식 푸대접  
 용암해수·해양심층수 t당 가격도 5배 이상 차이  
 관련법 제정 지연... 도, 성장산업 육성 ‘헛구호’

40만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현무암층에서 만들어졌다는 제주 용암해수가 도내 육상양식장에서 이용하는 바닷물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로 지정돼 고가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용암해수는 사실상 담수와 바닷물이 혼합된 ‘염지하수’에서 벗어나 질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1년도 먹는 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과 해양심층수의 t당 평균가격을 고시했다. 해양심층수 t당 평균가격은 6955원.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의 가격은 0.50ℓ 336원, 1.50ℓ 984원, 10.00ℓ는 7726원이다.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가격은 1.00ℓ에 1266.6원, 2.00ℓ는 6784원이다. 이에 반해 제주용암해수 t당 가격은 1671원에 그치고 있다. 해양심층수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이처럼 제주용암해수의 판매가격이 낮은 것은 ‘해양심층수’처럼 ‘먹

는 염지하수’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양심층수처럼 관련 법률을 제정해 수질관리기준과 이용방법 등을 마련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등을 명시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법 제정도 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용암해수는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용암해수는 제주도 구좌읍 한동리에 위치해 있는 용암해수 산업화단지에서 지표면에 직접 관정해 150m정도에서 취수하고 있고 해양심층수는 동해안 지표면에서 바다쪽으로 수 km 나간 후 파이프를 연결해 200m 이하에서 바닷물을 취수하고 있다. 초창기 용암해수산업을 주도했던 한 교수는 “용암해수는 40만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현무암층에서 생성된 염지하수로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해양심층수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밀도가 높아져 바다심층으로 가라앉아 심해의 골을 따라 순환하는 물이다. 서로 성분은 다르지만 똑같은 바닷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해양심층수 산업을 벤치마킹해서 제주용암해수 산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용암해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며 “모범도 없이 용암해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 “日 원전수 방출 IAEA 절차 지키면 반대 안해”

정 외교, 대정부질의회서 답변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결정에 대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맞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회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결정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 정부가 후

쿠시마 원전수 방출을 논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 장관에게 “정부 방침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출에 앞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정부와도 사전 협의하고, 앞으로 IAEA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맞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7면

## “행정구역 조정, 도민 공감대 형성부터” 제주와미래연구원·한리일보 공동 기획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째로 접어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에 멈춰 있다. 최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주시를 2개의 관할로 나눠 행정시를 3개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맞물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선 제주도와 제주도회의의 의사 합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7면

한리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제주시 2개 행정시로 분리, 특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지난 13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대운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행정구역조정, 주민자치권 확대에 이어질 것인가 ▷특별자치도 입법취지, 권력분산과 견제 가능한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관련 문제점 ▷도민 지지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구역 조정 관련 논의는 아직 도민사회에 많이 퍼지지 않은 만큼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 방사능 오염수·코로나 대응 등 ‘도마’ 제394회 도의회 오늘 개최... 내일부터 도정질문

올해 세 번째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선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에선 중부공원과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제3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 26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진다. 27일에는 손유원 제6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며, 28일부터 29일까지 이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도정질문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 백신 물량 확보 및 점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개

설, 4·3 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제주도의 계획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 지사가 대선 출마 등 중앙 정치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마무리되면 중부공원과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비공인시설과 하천 간 이격거리 확보, 갭도 등 하천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확보, 중수도 처리시설 관리계획 검토 등을 주문하고 조건부 통과시켰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원안 의결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소유부지 매각(공유재산심의)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관련기사 7면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큰 내일로

**HEUNG-A**  
**(주) 흥아**  
**(주) 경원**  
**경원건설**

대표 **문경천**

M. 010-3188-8629 E. ha2100@nate.com  
 T. (064)742-2100 F. (064)744-2100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